



본란의 기사는 본회의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로는 본회 國際部(TEL: 553-0941/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EC 이사회의 정부간 협의('91. 6. 28~29) 결론

EC의 정치, 경제, 통화동맹에 관한 조약 초안에 대한 최종결정이 '91. 12월말 이후로 유보됨에 따라 그때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이다. 同 조약중 정치적 동맹(Political Union)은 대외정책 및 안보, 방위 그리고 유럽 의회의 권한과 투표권을 포함한 유럽 시민권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며, 통화동맹에 관한 논의는 EC 단일 초점에 두고 있다.

2. 日·EC 공동선언

EC와 일본은 양국간 공동선언문 전문에 관한 포괄적 합의에 도달했으나 프랑스는 여전히 시장개방에 대한 일본의 강력한 언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인식은 7월 중순경에 있을 예정이다.

3. 스웨덴, EC 가입신청

스웨덴이 공식적으로 EC 가입을 신청했다. EC 회원가입 협상은 1993년 안으로 종결될 것이나 회원 자격 부여는 1995년 이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 유럽 사법 재판소, 반덤핑 관세 취하 판정

유럽 사법 재판소는 최근 매우 드문 경우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업체인 Al Jubail Fertilizer Company社에 대해 EC 이사회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취하했다.

사우디 수출업자는 EC 산업의 피해에 근거한 관세를 계산 등 덤핑 조사 기간 동안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EC 집행위는 이번 Case로 인해 향후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었으나 재판소는 그러한 요구조항을 부과하지는 않고 다만 향후 EC가 수출업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보다 신중하도록 언급했다.

5. EC, Floppy Disc 반덤핑 조사 개시

EC 집행위는 일본, 대만, 중국산 플로피 디스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6. EC 회원국간 상품이동 간소화 지침

EC 회원국간 상품 이동에 있어서의 물리적 통제와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한 지침이 채택되었다.

7. EC, 일부 전자부품 수입관세 유보

EC는 일부 마이크로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하기 품목에 대해 '91.7~'91.12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CN Code : 8471, 8473, 8501, 8522, 8523, 8529, 8531, 8532, 8533, 8534, 8536, 8540, 8541, 8542, 8543, 8544, CN Chapter 90의 것.

EC는 역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또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 관세 유보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8. 프랑스 정부 보고서, "Buy European" 정책 강조

프랑스와 유럽의 전자 산업에 관한 프랑스 정부 보고서가 최근 출간되었다.

여기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Buy European" 정책이 옹호되었는데 매우 정부개입주의(Interventionist)적인 성향이 보인다.

동보고서는 Philips나 Siemens 또는 SGS Thomson社 등 어떤 회사도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을 것임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필립스와 지멘스는 자신들의 반도체 부문에 대한 합병을 거절했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몇몇 기업들간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EC의 농업 보조금과 같은 방법으로 EC의 전자장비 제조업자들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조만간 위의 제안들을 정책안으로 만들 것을 고려중이다.

9. 영국내 일본 제조업자의 현지 부품조달 저조

영국 상무성은 영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이 그들의 연간 부품 소요량의 15% 정도만을 영국 회사들로 부터 구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 부품 사용률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은 없으나 최근 영국 회사들이 공급하는 부품의 사용률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일본 전자산업협회(Japan Electronics Business Association)가 창설되었다.

10. HDTV 표준화

유럽 HDTV의 기술적 표준을 통일하기 위한 지침 초안이 제안되었다. 현재 여러가지 표준 방식이 있으며 이들 기존 방식들을 합의된 단일 방식과 함께 계속 사용될 것이나 1993년 이후 EC에서 판매되는 모든 TV는 제안된 단일 표준방식과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11. 도시바, EC 경쟁법 위반

EC는 최근 일본의 도시바에 대해 200만 ECU의 벌금을 부과.

이는 도시바가 자사 사진 복사기 독점 유통업자들과 맺어온 여러 협정에서 수출금지 조항을 삽입하여 EC 조약 85조(경쟁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금은 조사동안 도시바의 협조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는데 현재 도시바는 EC의 경쟁법 준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오고 있다.

12. ICL社, Nokia Data社 인수

EC 집행위의 M&A 심사부서는 영국의 컴퓨터 회사인 ICL社의 Nokia Data社 인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ICL社는 얼마전 일본 후지쓰社가 경영권을 인수했다. EC 집행위는 영국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이와같은 대규모 합병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일단 재심이 시작되면 한달내에 승인이 나거나 혹은

조회가 있게 된다.

13. 프랑스 Bull/Thomson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철회

EC 경쟁법 관련 집행위원인 Leon Brittan은 최근 프랑스 수상과의 회담 결과를 언급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했던 Bull社에 대한 정부 보조금 조사를 연기했음을 발표.

한편,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전자산업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것을 결정했으나, 톰슨社에 대한 재정지원은 양기로 결정했다.

14. EC 집행위, 韓·日本産 CDP A/D 조사 착수

한국·일본산 CDP(CN Code : 8519 9910)에 부과되고 있는 덤핑관세를 수출업체가 흡수하고 있다는 EC 업체의 제소가 받아들여져 조사가 개시됐다.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의 첫 독립고객에 대한 판매가가 반덤핑 관세만큼 인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집행위가 취할 절차는 아직 명확치 않으나 EC의 관련 규정이 GATT 반덤핑법과 양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5. EC, 일본산 CDP에 부분 再審 착수

일본의 CDP 수출업체인 Accuphase Laboratory와 EC 수입상의 PIA Hi Fi Vertriebs GmbH는 일본산 CDP에 대한 부분 재심절차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성공적으로 주장이다.

Accuphase의 덤핑마진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일반 관세 32%보다 낮다고 주장. 同社의 제품을 수입하는 일부 수입상들은 관세환급을 받았다.

EC 업체가 생산하는 CDP는 Accuphase社가

생산하여 EC에 수출하는 CDP와 유사제품이 아님을 강조했다.

16. EC, 중국·홍콩산 CTV에 대한 확정 판정

중국과 홍콩산 소형 CTV에 부과되고 있는 덤핑 관세가 곧 확정될 예정이다.

중국산은 17.4%에서 15.3%로 인하되며 히다찌와 산요 合作 업체들로부터 대EC 수출에 부과되는 세율은 각각 13.1%, 7.5%이며 홍콩 업체들에게는 2.1~4.3% 예상된다.

17. EC, 지멘스에 대한 정부 지원 조사

EC는 브러셀 지역에 지멘스의 정보처리사업에 대한 8백 4십만불에 상당하는 벨지움 당국의 지원에 대해 이를 불법으로 보고 조사 개시했다. EC는 동 지원이 단일 시장내에 경쟁을 왜곡 하거나 왜곡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8. EC, 불社에 대한 정부지원 조사

EC는 프랑스 정부가 컴퓨터 제조업체인 Bull社에 공여키로 계획하고 있는 66억FF에 대해 조사 개시했다.

조사의 범위는 자본 투입 계획과 연구비를 포함하는 등 예상보다 넓은데 조사의 범위는 자본 투입 계획과 연구비를 포함하는 등 예상보다 넓은데 그 목적은 자금이 경영난에 빠져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순수한 조직 재구성에 사용되도록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지원은 정상적인 경영여건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C는 지급을 금지하거나 지급되었으면 이를 상환토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19. 독일 환경처, 전자제품에 대한 제안

독일의 환경장관은 1994년부터 전자제품의 제조업체와 중간상들은 의무적으로 중고제품을 회수토록 제안했는데 이는 가정의 쓰레기 양을 줄이려는 의도이다.

또한 해체와 재활용이 쉽도록 전자제품을 개발하는 제조업체에게 인센티브가 제안되었다.

환경문제는 현재 EC와 각 개별 회원국들에게 우선 순위 사항이다.

20. 사법재판소, 덤핑가격 관행규제

유럽사법재판소는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에 대해 가격정책에 관한 의무사항을 명백히 하여 EC 집행위가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

한 화란의 Akzo社에 대해 취한 결정을 확인해주었다.

유력 기업들은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평균 변동비 이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집행위는 유력 기업이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용납할 수 없는 가격정책을 취하면 즉각 개입토록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1. 전자공업에 대한 EC 정책 제안

프랑스 전자산업의 대변인은 EC의 전자공업에 대해서도 농업정책과 유사한 유럽 지원정책의 도입을 요청했다.

유럽의 전자업체들은 상기 정책의 수립과 유럽산 부품을 구입토록 독려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